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50호
2020.3.23

정책동향

■ 노후 인프라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 체계 강화 필요

시장동향

■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하강 국면에 대비해야

산업정보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책임 및 처벌 강화 개정 주요 내용

CERIK, 25주년 비전 2030 선포

■ “탁월한 프로페셔널, 건설산업 성장 파트너”

건설논단

■ 목적성을 잃어버린 건설 별점제도 개정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노후 인프라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 체계 강화 필요

- 유지·보수·보강 중심의 노후 인프라관리에서 생애주기 관점의 체계 전환 시급 -

■ 인프라 시설 노후화 대응과 안전성 확보 위해 부단히 노력

- 노후 인프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
 -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등 정부는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대응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 인프라의 노후화 속도와 양적 규모가 증가하면서, 안전성 점검 및 보수·보강뿐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된 생애주기 관점의 인프라 관리 체계가 절실한 실정임.
 - 「기본법」 및 기본계획(안)¹⁾ 수립을 통해 인프라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에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음.
 - 사후대책형 노후 인프라관리에서 예방적 대응과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조직(시설물 관리·감독기관 등), 프로세스(생애주기 관점), 시스템(점검 및 보수·보강 데이터 축적) 등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이 시급함.
- 신규 인프라 건설 투자 규모의 약 20~25%²⁾를 차지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2020년부터 4년간 약 32조원(연평균 8조원 : 공공 약 5조원, 민간 약 3조원)³⁾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이 전체 중 40~5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⁴⁾은 공공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관리에 시설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생애주기 관점의 통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체계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음.
- 기본계획(안)에 “선제적 관리 강화 체계 마련”, “생활안전 관리 수준 상향”,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 육성 추진” 등의 4대 전략이 도출되어 시설물의 관리·감독기관에 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속가능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2019. 12.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내 교통인프라 유지보수 투자의 향후 변화 추이”, 건설이슈포커스, 2016.

3) 정부관계부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2019.

4)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기반 구축 및 촉진방안 연구보고서”, 2016.

- 이는 관리계획수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작용하여 향후 구축될 인프라시설 관리 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임.
- 하지만 기반시설의 가치 점검 및 유지, 최상의 안전 및 서비스 제공, 재원조달 계획을 통한 생애주기비용 최적화 등의 상세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위해 약 2,000억원 투자

- 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⁵⁾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생산성을 약 25%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노후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확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예방형 관리 체계 도입, 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도입 등 정부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인프라 시설관리 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
 - BIM, IoT, Big Data, AI 등 디지털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신규 인프라 시설물의 건설과 운영이 통합된 생애주기 관점의 인프라관리 체계 전환은 필수 과제로 인식됨.
-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관리 체계 도입은 노후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확대, 공공 재원의 효율성 제고,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비즈니스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의 인프라 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LOS⁶⁾)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 및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또한, 공공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의 자산가치 최적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함.
 - 최근 디지털 기술은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점검, LOS 지속성 유지를 위한 관제 기능, 적재적소의 의사결정 지원 등 효율성에 대한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향후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설물의 관리·감독기관은 인프라관리 체계 구축과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해야 함.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SO 5500x 시리즈⁷⁾, 국제인프라관리매뉴얼(international infrastructure management manual) 등 범용성이 확보된 글로벌 표준 기반의 인프라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되어야 함.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5) 2020년 4월부터 개발사업의 발주가 계획되어 있고, 총 4개 중점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12개 세부과제에는 건설 및 유지관리에 디지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실증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6) LOS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Level of Service를 의미함.

7) ISO 55000(기준 및 원칙), ISO 55001(체계 구축의 요구사항), ISO 55002(시스템 개발의 가이드라인)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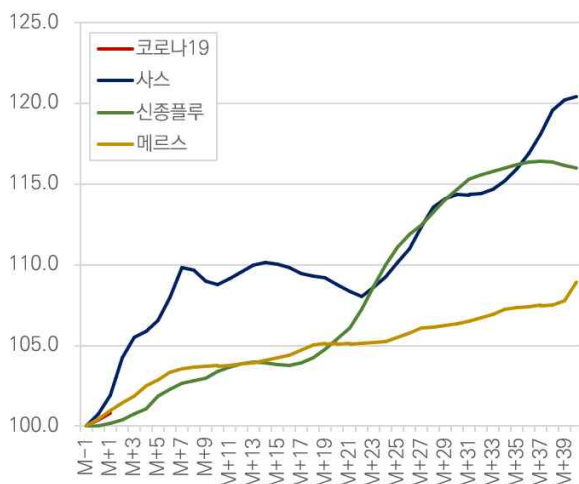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하강 국면에 대비해야

- 글로벌 실업 문제 부상, 2020년 2월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치 기록 -

2000년대 이후 창궐한 감염병으로 인한 부동산 및 금융 시장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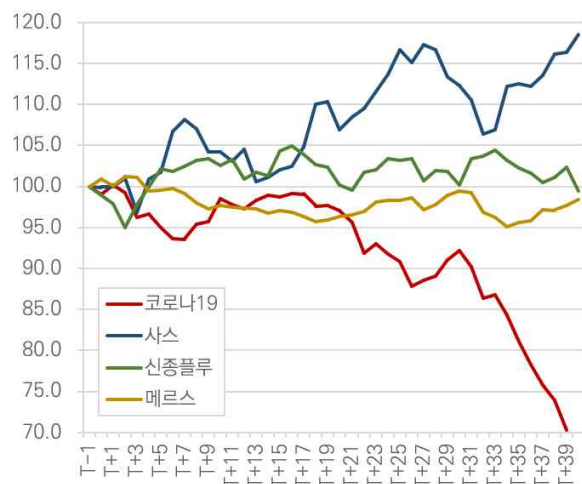
- 감염병 창궐 전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40개월 후 최대 20%까지 상승함.
 - 2000년 이후 발병한 감염병인 사스(2003년 3월~), 신종플루(2009년 4월~), 메르스(2015년 5월~)⁸⁾ 모두 본격적인 확산 전후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음.
 -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020년 1월) 역시 확산 1개월 전인 2019년 12월 이후 최신 통계가 발표된 2020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여타 감염병과 달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감염병 확산 이후 금융시장(KOSPI)은 단기 조정을 받았을 뿐 대체로 -5%(메르스) 내지 +19%(사스)의 변화폭을 보였음. 아파트 가격 변화도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냄(<그림 1> 참조).
 -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후 39일 차인 3월 18일 -30% 수준을 보여 대조적임(<그림 2> 참조).
 - 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하락, 10년물 국고채 금리 하락,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돼 금융시장에서의 하방압력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함.

<그림 1> 감염병 확산 후 월별 아파트가격 변화



주 : M-1월을 100으로 두고 월간 전국 아파트가격지수를 분석함.
자료 : KB국민은행(2020).

<그림 2> 감염병 확산 후 일별 주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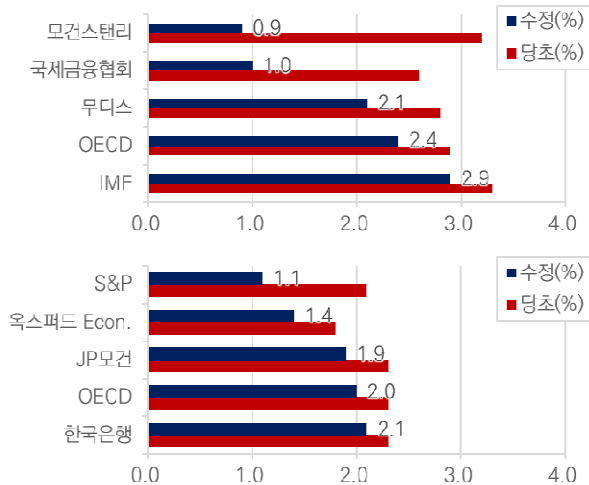
주 : T-1일을 100으로 두고 일별 KOSPI 지수를 분석함.
자료 : 한국거래소(2020), 한국은행(2020).

8) 각 감염병의 확산 기준(발병 기준일)은 국제보건기구(WHO)의 최초 상황보고서 발표 일자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국내에서 국지적으로 유행하였던 메르스는 국내 1호 확진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하강국면 면치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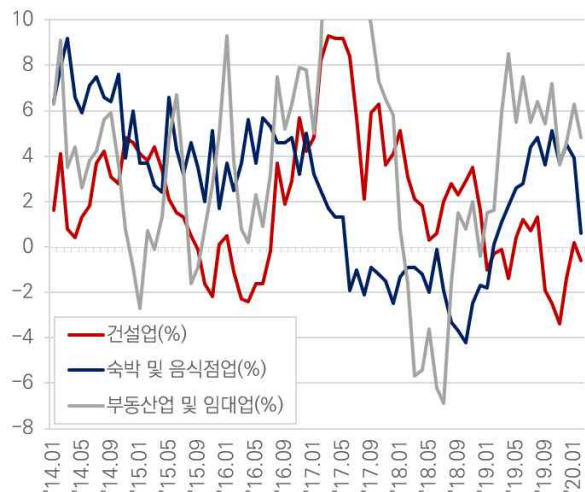
-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인 유가⁹⁾는 2002년 이후 최저, 사상 최고 수준의 낙폭을 보임.
 - 최근의 유가 하락은 러시아와 사우디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증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부 텍사스중질유(WTI)는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큰 하루 낙폭을 기록(당일 낙폭 기준 20% 이상)하며 빠르게 하락 중임.
 - 그 결과 중동지역은 물론 러시아(루블), 멕시코(페소)의 주가와 환율 가치도 하락을 거듭함.
 - 이에 따라 각 시장 전망 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공감하면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3> 기관별 세계 경제성장률(상)과 국내 경제성장률(하) 변화 추이



주: 1) 수정치는 본 고의 작성 시점 기준임.
 2) IMF 수정치는 IMF 총재의 언급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각 기관 경제전망 보고서(2020).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YoY 변화(계절조정)



주: 2017.3~2017.8.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전년 대비 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책적 요인이 컸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2020).

- 실물경제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실업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 국내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2020년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89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11월 대비 31.8% 증가한 수치임.
 - 세계의 생산기지이자 코로나19의 창궐지로 지목된 중국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월 35.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1~2월 도시 실업률이 6.2%를 기록하며 2016년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중국 국가통계국).
 - 미국에서는 3월 2주차까지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 신규 신청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규모 부양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이른바 '자동차 빅4'라 불리는 폴크스바겐, FCA, 르노, PSA 그룹이 일거에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1,40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이 영향을 받음.

9) 본 단락은 WTI를 기준으로 서술하였으나 두바이유 및 북해산 브렌트유도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실업 문제, 부동산시장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 30~40대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이 주택구입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투입되고 있는바, 만약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면 담보대출시장을 경유해 주택시장에 하방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 수도권에서는 최근 2년 새 30대와 40대가 각종 자금을 동원해 집을 마련했는데, 그 결과 해당 연령대의 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이 YoY(전년비) 각각 21.0%, 6.9% 증가함(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 특히, 해당 연령층은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70~80%에 달해 만약 실업이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렵고, 주택담보대출에 부담을 주어 주택시장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간 국내 주택가격과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을 때 주택가격 상승이 비교적 견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동일함(<그림 5>, <그림 6> 참조).

<그림 5> 韓 주택가격지수와 실업률의 YoY 변화



자료 : 통계청 한국감정원(2020).

<그림 6> 美 주택가격지수와 실업률의 YoY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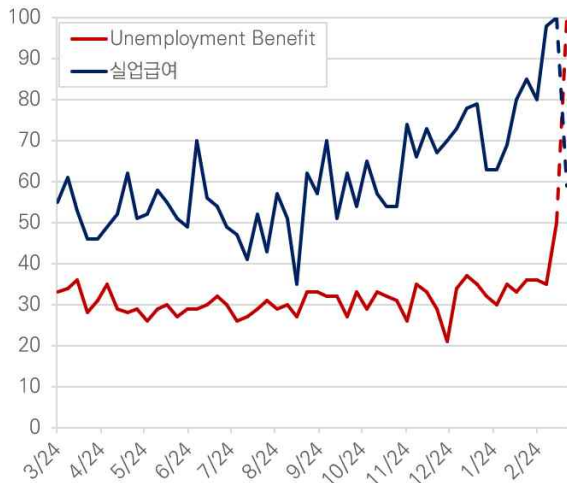
자료 :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2020).

- Google Trend와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분석¹⁰⁾한 결과, 실업 및 주택시장의 불안과 관련한 검색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공식 통계자료의 발간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부진이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임.
 - 다만,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데이터인 검색엔진의 검색어 빈도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들이 실업 문제와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파악하였음.
 - 최근 수년간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던 미국에서는 3월 들어 ‘Unemployment Benefit’에 대한 검색 빈도가 평시 대비 3배 이상 증가함(<그림 7> 참조).
 - 다음으로,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거 불안 및 주거 보조에 관련 검색 빈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는 전·월세 시장으로의 움직임 및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해결에 관심을 나타냄(<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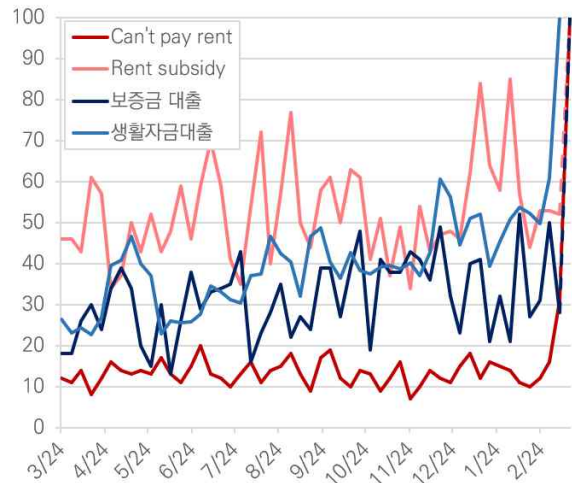
10) Google Trend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는 사용자의 검색 기록을 분석해 실시간 검색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최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검색 빈도가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실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는 논쟁이 진행 중이나¹¹⁾ 적어도 검색엔진 사용자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

<그림 7> 실업 관련 검색어 빈도 추이(%)



<그림 8> 주택시장 관련 검색어 빈도 추이(%)



주 : 1) 연간 최고 검색빈도를 100으로 두고 주별 검색량을 상대적으로 환산한 것임.
 2) 2020.3.18.을 기준으로 분석했으므로 3월 3주(3.15~3.22.) 데이터는 2020.3.15~2020.3.18 검색 추이를 연장 추산한 것임.
 3) 영어 검색어는 <https://www.ccn.com/google-data-hints-coronavirus-may-trigger-a-u-s-housing-market-crash/>를 참고함.
 자료 : Google Trends(2020), 네이버 데이터랩(2020).

■ 단기 금융 위험은 낮지만, 장기적 실물경제 부진에서 파생한 위험은 대비해야

- 국내는 수년간 주택시장에 강력한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 금융 위험은 낮은 편임.
 - LTV에서부터 DSR에 이르는 관리지표가 도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을 경감했다는 점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문제시되었던 위험은 제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이는 하락장에서도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위험으로부터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됨.
- 다만, 장기적인 실물경제 부진이 초래할 위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경기 하강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최근 거시경제와 주택가격 간 연계 채널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경기 침체가 가속화·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특히 12·16 대책에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어려워진 만큼,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한 주택 판매에 나설 경우 기존 주택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택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

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11) 특히 일반적인 수준의 분석에서는 검색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이러한 논란이 가중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책임 및 처벌 강화 개정 주요 내용

- 도급인 및 사업주의 건설기계 관련 의무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 처벌 강화 -

■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 주요 개정 내용¹²⁾

<표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 주요 내용

| 구분 | 개정 전 | | 개정 후 | |
|-----------------------------------|------------|--------------------|-------------|--|
| | 조항 | 내용 | 조항 | 내용 |
| 기계 등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 - | - | 제76조 | (대상)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향발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신설 | - | - | 제77조 | (주체) 노무를 제공받는 자 (대상) 27종 건설기계 운전원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 - | - | 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업자 사용 의무 신설 |
| 지게차 안전장치 및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 | - | - | 제80조 관련 | 안전장치 강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운전원 자격 강화(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
| 기계·기구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 확대 | 시행령 별표7 | 24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 시행령 별표21 | 기존 24개에 고소작업대 추가 |

●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향발기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신설함(법 제76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①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②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 확인, ③ 작업자의

12) 본 고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①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 강화, ②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 ③ 처벌 강화로 구분할 수 있음. 본 고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와 ‘처벌 강화’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함.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 강화’와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제749호에서 설명하였음.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보유 여부 확인, ④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⑤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이상 환경으로 작업수행에 현저한 위험 예상시 작업중지 조치(시행규칙 제94조)

- 건설기계(27종)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함(법 제77조).
 - 27종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의미하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제672조 제2항을 따름.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4, 교육내용은 별표5를 따름(시행규칙 제95조).
-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함(「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동식 지게차 운전원 자격 강화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사업주는 등록업체를 고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여야 함(법 제82조).
-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소작업대가 추가됨(시행령 별표21).

■ 처벌 강화 주요 개정 내용

-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법 제169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함(법 제167조).
 - 또한, 도급인과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규정도 신설됨.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종전과 동일하게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함.

-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양벌규정을 강화함(법 제173조).
-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법 제174조).

<표 2> 처벌 강화 주요 내용

| 구분 | 개정 전 | | 개정 후 | |
|---------------|--------|--|-------|---|
| | 조항 | 내용 | 조항 | 내용 |
|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 제68조 | (안전보건 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제169조 | (안전보건 조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 | | 제167조 |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
|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제66조의2 |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167조 |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
| 양벌규정 강화 | 제71조 | 해당 벌칙 조문의 벌금형 | 제173조 |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법인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토록 강화 |
| 수강명령 병과 | - | - | 제174조 |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임의적 병과 |

최수영(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탁월한 프로페셔널, 건설산업 성장 파트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립 25주년 맞아 새로운 비전 2030 선포 –

■ 지난 25년간 민간부문 최대 건설산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995년 3월 22일 설립 후, 건설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기업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함.
 - 지난 25년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산업 차원의 대안 또는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 310편, 건설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이슈포커스 500편 등을 발간함. 또한, 건설산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동향브리핑 750호, 스페셜 리포트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215호를 발간함.¹³⁾
-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건산연은 민간부문 최대 건설산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20년 3월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을 선포함.

■ 새로운 비전으로 “탁월한 프로페셔널, 건설산업 성장파트너” 제시

- 건산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탁월한 프로페셔널, 건설산업 성장 파트너(Excellent Professional, Construction Industry Growth Partner)”를 비전 2030으로 제시함.
 - 건산연이 새롭게 제시한 비전 2030은 탁월한 전문성, 사회적 책임의식, 직업의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설산업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
- 비전 2030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1) 시장친화적 정책 개발, (2) 산업 혁신과 글로벌화, (3) 지식 플랫폼과 열린 교류 활성화를 제시함.
 - 최우선적 전략으로는 ‘시장친화적 정책 개발’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두 번째 전략인 ‘산업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 연구원은 ① 정부조달 시스템 개선 및 불공정한 관행 해소 등 발주자 혁신, ②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촉진, ③ 현장



13) 집계 시점인 2020년 3월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함.

시공(On-site Construction)에서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Off-site Construction or Modular Construction)으로의 건설 생산방식 전환, ④ 건설 규제개혁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세 번째 전략인 ‘지식 플랫폼과 열린 교류 활성화’는 연구 결과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건산연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각종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산업이 공감하는 정책 및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로는 “인재, 열정, 실용, 협력, 윤리”를 선정하였음. 또한, 25주년을 맞아 엠블럼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연구원 이미지를 보강함.
- 새로운 엠블럼은 각종 연구 발간물과 세미나 등에 현행 로고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표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비전 2030 선포

| 구분 | CERIK 비전 2030 | |
|--------------|--|--|
| 미션 | 건설산업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여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 경제 성장에 공헌한다 | |
| 비전 | 탁월한 프로페셔널, 건설산업 성장 파트너 (Excellent Professional, Construction Industry Growth Partner) | |
| 전략 | 시장친화적 정책 개발 |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
| | 산업 혁신과 글로벌화 | ① 발주자 혁신(불공정 관행 해소 등), ② 디지털 전환 촉진, ③ 건설 생산방식 전환(현장시공→공장제작 및 조립방식), ④ 건설 규제개혁 등의 과제 적극 수행 |
| | 지식 플랫폼과 열린 교류 활성화 | 연구 결과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 향상 |
| 5대 핵심가치 | 인재, 열정, 실용, 협력, 윤리 | |
| 연구원 로고 및 엠블럼 |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현재 연구원 로고> |  <새로운 엠블럼> |

■ 건산연, 전문직업인(Professional)으로서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 활동 수행

-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전문직업인(Professional)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건산연은 열정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이번 비전 2030은 이를 위해 연구원이 추구하는 전략과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이광표 (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목적성을 잃어버린 건설 벌점제도 개정안

최근 건설업계에는 코로나19 못지않은 또 다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제도 개정안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런 벌점제도의 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몇 개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지분에 따른 벌점 부과에서 대표사 일방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나친 제재 강화조치로서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부실공사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 제한, 더 나아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미 시정된 2년이라는 기간 누적된 행위에 대한 벌점으로 적발 시점의 부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한 제재로 행위에 따른 적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단순 합산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한다는 점이다. 결국 현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 가능성이 커져 제재가 지나치게 한쪽에 편향돼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벌점 강화의 전제조건이라 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벌점 측정기준도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불명확하고 모호하며 중복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벌점의 상한이 없어 발주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이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은 「주택법」에 의거, 선분양 제한에 적용된다. 가장 낮은 제한기준, 즉 벌점이 1점만 넘어도 골조공사 3분의 1 이상 완료된 시점에나 분양할 수 있다.

사실상 사업 위험 부담을 항상 안고 있는 주택사업의 특성상 공급축소는 불가피하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을 키울 것이다. 특히 주택공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중소 건설업체는 자금 여력 상 후분양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주택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있어 자칫 벌점 부과가 갑질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한때 사회문제가 된 '하자 기획소송' 같은 벌점 관련 기획소송 증가로 사회적비용 낭비도 우려된다.

건설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벌점에서 최대 30배까지 벌점이 뛰어 중소 건설업계에 사형선고나 다름없고, 건설업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 취지가 후분양제 시행을 유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제도 취지에 맞는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0.3.17>

김영덕(연구본부장 · ydkim@cerik.re.kr)